

지난 3농혁신, 그리고 앞으로의 3농혁신

글 · 허승욱 | 단국대 교수 · 3농혁신위원회 위원장



산업으로서 농어업, 공간으로서 농어촌, 주체로서 농어민이 중심이 되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 보자는 3농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도 벌써 2년이다.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은 뭐가 뭔지도 모르게 휘익 지나가 버렸고, 2011년은 내내 가야 할 방향을 잡느라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전문가 몇 명이 만든 거창한 용역결과를 우리들의 계획이랍시고 공표하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었다. 좀 못나도 우리가, 좀 더디 가도 우리가 해 보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2011년 8월에 발표된 '충청남도 농어업 농어촌 혁신 기본계획'이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색을 입히고 있는 3농혁신의 밑그림이다. 그 해 후반기는 조직을 내실 있게 만들고, 좀 더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 나가는데 치중했다. 방향과 밑그림만 그리다 볼일 다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왔다. 돌이켜 보면, 술하게 만나 회의하고, 소주잔에 담은 고민들로 밤새우던 기억들로 아련하다.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만들었는지 내 연구실 한쪽 책장은 아직도 그 때의 자료들로 가득하다. 이것이 보물이고, 힘이 되었다. 출발 신호만 떨어지면 바람을 가르고 튀어나갈 것만 같은 적토마의 튼튼한 허벅지를 가지게 된 것 같았다. 낡은 노트 한권으로 중간고사를 치르던 촌놈에게 제대로 된 참고서가 생긴 기분이었다.

‘충청남도 3농혁신, 이제는 실천이다’

2012년 ‘열린 충남’에 기고했던 글의 제목이다. 이제 방향을 잡고 뜻을 모았으니 남은 것은 참여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2012년과 2013년은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르게, 그러나 혼신을 다해 달렸다. 그런 3농혁신이 또 새로운 해를 맞고 있다. 달라질 것이야 뭐 있겠냐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반추해보는 것도 의미가 크리라 생각된다. 출발과 함께 한참을 내달리고 있는 적토마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고, 박차를 가해 속도를 높여야 할까? 아님 숨고르기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해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타결된 한-호주FTA 때문이기도 하고, 2013년에도 여전히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농산물 수입과 육류소비량, 그리고 여전히 곤두박질치고 있는 식량자급률, 쌀 소비량 같은 우울한 지표들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아랫목의 한 줌밖에 안되는 미열과 두터운 솜이불 한 장으로 이 겨울을 이겨 내고 있을 촌부들의 한숨소리가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기본기에 충실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

작년 일이다. 어느 지역에서 3농혁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1시간이나 지나서였을까 어느 어른신이 손을 번쩍 들고 지금까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질문 하나 하신다 한다. 그러시라 했더니 “3농혁신은 안희정씨 아녀?” “글고, 우리하고는 뭘 상관이여?” 하신다. 돌직구 한 방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다. 사실 누구나 이야기 도중에 급작스런 질문을 받으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게다. 나는 이내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누가 모여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앞서서 3농혁신을 끌고 나가야 하는지 조곤조곤 이야기 드렸다. 그런 이야기들로 나머지 1시간을 채운 것 같다. 그제야 어른신께서는 이해되었다는 고갯짓을 연신 하셨지만, 천안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실 안희정 지사가 3농혁신이라는 이름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도지사만의 3농혁신이 아닌데... 우리 모두의 3농혁신인데... 그래야만 하는데... 하는 생각들로 어지러웠다. 우리는 편 가르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네 것과 내 것을 잘 따지는 것이 편리하고 현명한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세상이다. 네 것과 내 것의 경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들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우리 공동의 가치를 도출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나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3농혁신이 우리 공동의 가치가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어른신의 질문에 대한 내 결론은 ‘기본기에 충실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였다. ‘3농혁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는 제법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당장에는 생소해도 서서히 입에

불고,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민선5기 3농혁신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더욱 큰 변화는 3농혁신이 농정국민의 정책이 아니고, 말로만 선전하는 도정과제가 아니라 행정, 보건, 복지 등 충남도 모든 실국에서 고민하는 과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3농혁신이 충남도정의 핵심가치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의 흔들림 없는 진정성과 모든 실국의 전향적인 뒷받침으로 인한 성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 우리들은 지난 3농혁신을 통해 ‘우리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답은 분명하다.

‘우리 공동의 가치’ 3농혁신의 확산

앞서 말했던 3농혁신의 가치는 너와 나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만드는 것이라 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것이고, 도시와 농어촌이 만나는 것이고, 생산-가공-유통이 만나고, 민과 관이 만나는 것이며, 도지사와 4-H 젊은 농군이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융합이고, 통섭(統攝)이다. 어려운 학문적 용어 같지만, 알고 보면 오래전부터 우리들이 해왔던 것을 되새김질 하는 것이다.

축산의 축(畜)자를 보자. 겹을 현(玄) 밑에 밭 전(田)이 있으니 축산은 밭을 기름지게 만든다는 것으로 경종과 축산은 본래 하나라는 의미 아닌가. 갯벌은 육지의 육수(陸水)를 먹고 자라니 바다와 육지 또한 하나가 아닌가. 농촌 없는 도시가 있을 수 있겠으며, 생산자 없는 소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제 이 단절의 고리를 하나로 이어 가는데 3농혁신의 목표가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3농을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은 어느 지표 할 것 없이 빨간 신호등이다. 파란 신호등으로 급방 바뀔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무작정 직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가야 할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한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실천과 확산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과정 동안 나름대로 몸에 익히고 쌓아 온 내공들이다. 그렇다. 이제 일종의 매뉴얼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이 매뉴얼을 들고 하나씩 돌씩 보태면서 가면 된다. 매뉴얼도 없이 천방지축, 좌충우돌할 때와는 달라도 다르다. 엉금엉금 바닥을 기던 돌 지난 아기가 이제 상다리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일어나려 한다.

2014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큼성큼 걸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농혁신의 확산을 위해 2014년이 갖는 의미는 무척 크다. 6월 10일 지방선거를 통해 7월 1일이면 민선 6기도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3농혁신이 민선5기에서 끝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한다. 어떤 이유로든 3농혁신의 맥이 끊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다. 선생님께서 한 시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빼곡히 써 내려간 칠판, 누구 하나 옮겨 적지도 않은 채 수업 끝났다고 뻑뻑 지워버리고 다음 시간을 시작하는 느낌이랄까? 지금까지 네 것과 내 것이 잘 융합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민선 1기와 2기도 이어져야 하고, 그렇게 6기도

잘 이어져야 한다. 3농혁신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관점에 동의했다. 그것은 '계승'과 '혁신'이었다. 제대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모 없는 자식 없고, 사부(유 의태) 없는 허준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내세웠던 슬로우진 중의 하나가 “닭고, 조이고, 기름 치 자”였다. 그래서 민선 4기의 정책들을 선부르게 갈아엎고 새로운 정책들로 도배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은 이미 캐비닛 속에 있다. 정권이 바뀌는 순간 전 정권의 색깔 지우기, 결국 새로운 색깔로 도배하는 것은 아무리 진보라는 이름의 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가장 보수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2014년, 3농혁신의 첫 번째 큰 방향 역시 더 잘 닭고, 더 잘 조이고, 더 잘 기름 치는 일이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사람과 조직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꼭지점에는 행복이 있다. 그런데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누구는 쌀값에만 관심 있고, 어떤 이는 돼지 값에만 관심 있다.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는데 누구는 박수를 치고, 어떤 이는 삭발을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산업과 이해가 공존한다.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양산되며, 이것이 현실이며 일상이다. 따라서 이런 갈등구조를 협동구조로 바꾸어 내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서로 우격다짐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고 물러난 만큼을 합의와 타협의 열매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 사람 사이의 일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없다. 지난 3년간 3농혁신위원회가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 충남 농정의 한 가운데에 농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3농혁신위원회를 세웠다. 머리를 맞대야 하니 서로 시간도 맞춰야 하고, 장소 잡기도 만만치 않다. 충남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 하나면, 반나절 까먹기는 일쑤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말 많은 회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헌신적인 공직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때로 피로를 호소하면서도 묵묵히 문서를 정리하고, 전화를 돌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5개 사업단과 18개 TF팀으로 구성된 3농혁신위원회에 민과 관, 농협 할 것 없이 모여 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2014년에는 한 단계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무엇이 필요한가?

제도와 예산

3농혁신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조직을 중심으로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하다.

제도는 법이나 관습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다. 때문에 3농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 특집2 _ 충남의 민선 6기를 묻다

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정비될 필요가 크다. 한참 논의 중인 농어업회의소 역시 좋은 제도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는 옷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내용이 높다면 모든 기회는 우리를 보다 내실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예산이다. 그렇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 2014년 충남도의 예산안은 대략 5조 1,492억 원을 편성했고, 분야별로 복지분야 1조 2,425억 원, 농어촌분야 6,516억 원, 건설·해양분야 706억 원 등이다.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안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동안 3농혁신의 기본기를 다지고 틀을 잡는데 전력투구하느라 차일피일 뒷전으로 미루어 온 문제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2012년부터 시작된 도민참여예산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업 분야에서는 한 층 수준 높은 예산운용의 기초를 세웠으면 한다. 농어촌분야 예산이 6천억 원 이상이라지만, 실제 투자되는 농림수산사업비 규모는 4분의 1 수준이다. 그 중 절반 가까이 국비에, 나머지 절반 가까이가 시군비에 매칭되며, 도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 국비사업은 입맛에 따라 받고 말고를 결정하기 어려우니 결국 시군비에 매칭되는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답이다. 문제는 시군의 상황과 여건은 모두 제각각인데도 국비-도비-시군비로 이어지는 예산 수립 절차나 획일성에 있다.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행정적으로는 시군이 예산 수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도민들의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지령이 손잡고 부산가는 일만큼이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농어업 관련 예산을 한 데 쏟아놓고 제대로 된 가르마를 타 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운 전략적 방향에 부합하도록 다시 재정렬하고, 시군의 특성에 부합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도의회와의 대승적인 협력과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3농혁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던지는 담론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난 3농혁신과 2014년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조직, 제도, 예산이라는 큰 틀의 방향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 했다. 모든 것은 우리들의 건강한 논의구조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며 세련되게 가공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의 3농혁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던지는 담론이다. 잘 나가는 글로벌 코리아, 그러나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처럼 내내 불안하고 불편한 모습으로 서있는 대한민국에 외치는 고함이다.